

# ‘엄마의 학대’ 알고도... 아이 보호 못한 세상

### 과잉행동장애·실명 우려 등에도 치료 못받고 수년동안 방치 학교·아동기관·경찰 나섰지만 엄마 반발로 아무런 조치 못해

학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관련 기관들이 친엄마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엄마의 반발에 부딪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초등학교생인 피해 아들은 엄마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렸고, 개·고양이·오리 등 동물 배설물 속에서 자라는 등 물리적 방인과 학대를 당했다. 심지어 시력이 악화돼 실명 위기에까지 놓였는데도 엄마의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 초등학교 A(13)군은 극심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소동능력 상실, 시력 악화에 따른 실명 우려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친권자인 A군의 친모 김모씨가 A군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육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하겠다. A군의 시력 등을 치료하자고 김씨를 설득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면서 “엄마의 강한 반발 탓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들 기관은 이대로 방치할 경우 A군의 상태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판단. 엄마인 김씨를 아동학대·의료방임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수년째 학대가 지속된 탓이었다.

A군의 이상 증세는 초등학교 입학 직후 감지됐다. 2012년 4월 학교에서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A군은 ‘공격적 행동’이 나타났다. 학교 측은 A군을 ‘위험학생 대상’으로 관심을 두고 관리했다.

그러던 2014년 5월 A군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A군이 집에서 기르는 개·고양이·오리 등 동물 배설물 속에서 방치된 양육되고 있다는 신고였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동물 배설물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공격 성향도 강해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군의 보호를 위해 엄마와 떨어져 위기가동청소년보호시설인 ‘그룹홈’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하지

만 A군은 그룹홈에서 과격행동 증상이 심해져 공동생활이 불가능했고, A군은 나주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치료 과정에서 결박된 A군의 모습을 엄마인 김씨가 보게 됐고, 김씨는 강하게 반발하며 “내 자식 내가 키우겠다”며 퇴원을 요구했다. 오히려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불신만 쌓게 하는 결과가 됐다. A군은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결석이 잦았다. 아동보호 관련 기관들의 관심도 멀어졌다.

A군의 학대 사실이 다시 드러난 것은 2015년 12월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의해서였다. 장기결석 중인 A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A군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동물 배설물 속에서 키워지고 있었다. 학교와 동사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대책을 세우려고 김씨에게 면담

**초등생 A군에 무슨 일이...**  
동물 배설물 속 방치 양육 이상증세에 정신병원 치료 “내 자식 내가 키워” 강제 퇴원 검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엄마 출석 거부 조사도 못해 광주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제도적 허점에 대책 마련 고심

을 요청했지만 내뱉겼다. 경찰마저도 거부당했다.

어쩔수 없이 김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도 손을 쓰지 못했다. 엄마와 다른 보호자가 없는데다 형사처벌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조사 당시 김씨는 웨시어지장 절제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감안됐다. 결국 검찰은 형사 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광주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 법원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재판 출석도 거부했다. 광주가정법원은 김씨에 대해 조사 한번 하지 못한채 지난 5월17일 불처분 결정과 함께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26일 교육청·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A군의 보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엄마인 김씨의 반발과 거부로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는 최소 1년6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채 보고만 있어야 했다 는 것이다. 그동안 김씨의 학대와 방임은 지속됐고, A군의 건강은 악화됐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학대 아동을 구하는 것은 시간 싸움인데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물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25 67년... 백발이 된 참전용사 6·25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25일 오전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광주지역 전쟁참전 유공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 전두환 회고록 소송 서울 이송 신청 이유가... “광주는 5·18 정서가 매우 강해서”

회고록 논란으로 5·18민주유공자 단체와 유가족으로부터 피소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내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광주지방법원에 요청했다.

25일 광주지방법원,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이 소송 담당 법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바꿔 달라며 최근 재판부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신청서에서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하다. 재판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자 약한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유공자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은 지난해 12월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하도록 임시처분을 구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만원씩 배상하는 명령도 내려줄 것을 신청했다.

신청인들이 지정한 부분은 회고록 1권 ‘흔들의 시대’ 가운데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

(535쪽 등 18쪽)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349쪽 등 4쪽) ▲전 전 대통령이 5·18의 발단부터 종결까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27쪽 등 7쪽)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체대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어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470쪽) 등이다.

5·18재단은 ‘지역 정서 논리는 재고할 가치가 없다’ 등 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이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시대는 폭동으로 재조사·재평가가 필요하다”, “광주에서 국민의 살상행위는 없었고 발표명령도 없었다”, “나는 광주시대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씩 김군에 내놓은 제물이다”라고 썼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회고록과 관련해 형사소송을 당한 상태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회고록을 통해 비난했다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태 신부로부터 지난 4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다. 이 사건 수사는 광주지검이 진행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물에 빠져... 전남 사흘새 2명 사망·1명 의식불명

전남지역에서 사흘 새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시 돌산읍 한 펜션 앞바다에서 A(7)양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날 A양은 펜션 앞바다에 얽혀 있는 채로 발견됐으며, 출동한 119에 의해 근처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오후 늦게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 밤 10시10분께 여수시 남산동 수산물특화시장 앞 바다에서 B(여·45)씨가 숨진 채로 발견

됐다. 경찰은 B씨가 이날 밤 9시40분께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바다에 뛰어들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에서는 저수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후 12시56분께 나주시 시도면 한 저수지에 C(62)씨가 빠져 숨졌다. 이날 C씨는 폭 150m가 넘는 저수지를 혼자 헤엄쳐 건너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young@

## 새우 빼달라했는데... “알레르기 피해 손님에 6700만원 쥐러”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도 새우를 넣어 짜장면을 내놓은 중국 음식점 측이 손님에게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

○...25일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권)에 따르면 A(여·32)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한 중국음식점에서 짜장면을 먹다 새우살 일부를 씹고선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고 병원 치료에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으며 1의원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최근 재판부는 음식점 측이 청구액의 60%인 6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에게 미리 설명을 들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새우를 넣은 음식을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갔는데 그로 인해 원고(A씨)의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아 피고(음식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술김에 선거벽보 찢었다가 벌금 100만원

### ‘문재인 치매설’ 20대는 300만원

‘문재인 치매설’을 퍼뜨린 2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술김’에 또는 ‘욕’해서 선거벽보를 뜯거나 찢은 4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후반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치매-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과 함께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뒤 당시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못하

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정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B(43)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4월22일 술에 취해 전남의 한 지역 건물벽에 부착된 선

거벽보 전체를 손으로 뜯어내 훼손했다. C씨는 광주의 한 공원 앞 선거 벽보에서 모든 후보자의 얼굴 부위를 칼로 긁어 훼손했으며, D씨는 광주의 한 지역에서 선거 벽보를 양손으로 잡아 뜯은 뒤 200m 가량 끌고 갔다. E씨는 전남의 한 아파트벽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서 일부 후보의 사진에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 분양 전환 500만원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